

Business Economics

月刊

企業經濟

1995. 12 통권 제29호

現代經濟社會研究院

月刊
企業經濟
 1995. 12

이달의 시론	4	· 한국 경제의 회고와 전망	김병주
경제 전망대	6	· 비자금 파문과 경기	
기획 특집	주제 : 세계화를 향한 신경영 전략		
	12	· 신경영의 현재와 미래	이장우
	19	· 능력주의 - 인적 자원 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	고수일
	26	· 시장 지향적 기업 문화의 정착	박종원
	31	· CALS를 통한 기업의 물류 혁신	김성희
중시코너	39	· 비자금 파문과 주가	염택선
경제 현안	41	· 대외 통상 협상의 문제점과 과제	이용우
	48	· 부동산 시장 전망	김선덕
	54	· 일본의 금융 산업 위기와 시사점	임진국
	60	· 여성의 사회 참여 현황과 문제점 - 기업, 여성, 남성들이 보는 여성 취업의 실태 -	김인준 채창균
문화산책	73	· 첼리스트 요요 마가 서울 연주에서 남긴 흔적	강일모
	74	· 고전명화의 감상	이영재
건강상식	75	· 간염	정영화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실린 모든 내용은 발행인의 사전 허가 없는 무단 전재와 역재를 금합니다.
 · 본지에 수록된 원고는 필자의 개인 견해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무관합니다.

산 업 분 석	76	· 과학 기술 정책의 올바른 방향	이봉진
	84	· 네트워크 정보화와 기업의 대응	박송동
	90	· 지역 건설 수요의 변화와 과제	윤창호
	96	· 정보고속도로의 구축과 인터넷의 역할	백옥인
신 경영 연구	102	· 저금리시대의 기업 재무 전략	엄상용
	108	· 기업의 대외 협상 - 문화적 차이에 대한 이해	홍기종
	114	· 인사평가제도의 재설계	한주희 전상용
	120	· 선진 기업의 경영 전략(IX) - AT&T社	안경모
월 레 특 강	122	· 국제 경제 환경의 최근 변화와 우리의 자세	유장희
경 제 정 책	131	· 주요 경제 정책 및 이슈	
해 설 코 너	133	· 파생금융상품 관련 용어 해설	
신 간 안 내	134	· 연구 보고서 및 신간 안내	
주 요 경 제 지 표	135		

통권 제 29호

등록번호 라-6125

등록일자 1993년 7월 8일

발행일자 1995년 12월 1일

편집 및 발행인 김중웅

편집위원 정순원(위원장)

김주현 김원규

조홍래 김선덕

류재현 고수일

배수현 박기백

이용우

편집주간 심재철

발행처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계동 140-2

대표전화 (02)746-8041

F A X (02)746-8050

인쇄 서울컴퓨터인쇄사

대표전화 (02)636-0555

한국 경제의 회고와 전망

김병주 / 서강대학교 교수, 금융

목하 비자금 문제로 얼어붙은 정국때문에 더욱 춥고 길게 느껴지는 요즈음에도 의연히 내년 먹고살 살림 채비를 준비하고 있는 경제 주체들의 존재가 대견하고 고맙게 느껴진다. 생각해보면 칼로 물 벨 수 없듯이 흘러온 세월을 1년 단위로 구분하고, 국민 경제도 해가 바뀔에 따라 크게 다른 흐름을 나타내리라고 예상할 수도 없다.

그렇다 해도 올해 경제 상황부터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1995년 국민 총생산은 당초예상을 웃돌아 연평균 9%를 다소 상회하는 수준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생산자 및 소비자 물가의 오름세도 4~5%대에 머물러 안정세를 지속할 것이다. 반면, 그간 설비 투자의 과열, 여행 수지의 대폭 적자 등으로 국제거래의 경상 적자가 80억 달러 이상으로 벌어지고, 중화학 공업 부문은 이례적인 호황을 누리는 반면, 경공업 부문은 깊은 침체의 늪에 빠지는 경기의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근래 경제 예측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의 초점은 국내 경기의 호황기 정점이 언제일 것이며, 꺾인 경기가 연착륙(soft-landing)할 것인가에 모아졌다. 이번 경기 순환의 정점이 내년 초냐, 금년 말이나로 갈라졌던 의견이 최근에는 대체로 금년 제3분기(9.9% 성장률 잠정 추계)로 수렴된 것으로 보인다.

남은 문제는 연착륙 여부이다. 연착륙이란 물론 활주로에 착륙하는 비행 기술에서 비롯된 은유인데 문제는 활주로의 높이이다. 선진국의 경우, 성장률 3%대의 경제 성장률도 호황이라고 간주되기 때문에 침체기 안정권 성장률은 2% 이하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문제는 국민 경제의 잠재 성장률인데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7% 내외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그 이상으로 잡는 소수 의견도 있다. 말하자면, 한국 경제는 활주로가 아직은 선진국보다 높은 고원 분지에 위치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침체기의 경기가 한 두 분기쯤 6% 이하로 잠시 내려앉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1996년 세계 주요 선진국 경기는 전반적으로 1995년보다 신장된 3% 이상에 이를 것으로 외국 경제 예측 기관들이 내다보고 있고, 원유 등 원자재 가격도 대체로 안정세를 보일 것이라 한다. 미국 경제의 경쟁력 회복, 금융 정책의 기민성, 재정 적자폭 축소 노력 등으로 달러화의 강세가 지속될 것이고, 일본 엔화의 對달러 환율이 90~110선에서 형성될 전망이다. 이같은 가정 아래 수출의 예상 신장률 15% 내외는 수궁이 간다. 일부 연구소에서는 수출의 성장 기여율을 약 48%로 추산하였다고 하듯이, 수출 부문에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내년도 해외 경제 활기에 견인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소비는 7~8% 수준에서 진정될 것이며, 투자 활동도 감소세로 돌아설 것이다. 설비 투자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린다. 그간 대형화된 자본 스톡 규모로 미루어 자동화, 감가 상각 등 대체 투자 활동만으로도 9%대의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는 예측도 있지만, 대체로 경제 성장률과 대등한 7% 수준을 접치고 있다. 민간 부문의 건설 투자는 올해에 이어 일반 투자보다 2%포인트 내외로 저조한 증가세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수년간 물가 오름세가 경제 성장 추세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수입 개방에 따라 중국 등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저렴한 상품이 대량 수입된 결과이다. 새해에도 생산자 물가는 2~3.5%, 소비자 물가는 국내 서비스료 인상 등으로 인해 그보다 높은 5% 안팎의 오름세를 시현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이상은 하나의 시나리오이다. 그것은 경제 외적 돌발 사태의 영향을 제외한 시나리오이다. 지금 진행 중인 비자금 정국이 어떻게 귀착되건 간에, 그간 확대 성장을 거듭해 이룩한 300조 원 이상의 국민 총생산 활동 수준에 비하면 5,000억 원 비자금의 충격을 과장할 까닭이 없으나,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향후 국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된다.

하나는 비자금 출처 조사와 관련하여 거대 기업인들이 예외없이 수사 대상이 되었고, 상당수는 사법 처리될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결국 기업의 장기 투자 의욕을 크게 저상시키고 해외로 뺏어나가는 기상을 꺾을 가능성이 있다. 다른 하나는 근로자에 대한 영향이다. 일반 근로자의 노동 의욕 상실도 문제지만 특히, 노조 활동을 격양시킬 소지가 다분하다. 노조는 비자금이 자기네 뭇을 전용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

울 것이고, 새로 발족한 강경 노선의 민노총 활동 개시 역시 폭발적인 운동을 예견케 한다. 1996년 봄철 총선에 즈음하여 맞물린 춘계 투쟁 때에는 정부의 경제 부문 통솔력이 크게 이완될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그같은 예견은 결국 고임금 인상 → 생산비 상승 → 물가 상승 → 대외 경쟁력 약화 → 수출 부진 → 실업 증가 → 사회 불안으로 연결되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최근 수년간 높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물가 오름세를 낮은 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근래 인플레이션의 주요인으로 작용한 농산물 가격을 수입 농산물로 오름세를 누를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5년 작황도 평년작 이하인 데다 1996년에는 세계적으로 곡물 생산이 여의치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더구나 최근 국내 가격 안정에 기여한 중국산 농산물의 경우, 자국의 곡물 생산 저조와 국내 곡물 수요 증가로 수출 여력이 크게 약화될 것으로 보여 물가 안정 토대의 한 모퉁이가 허물어질 공산이 크다. 서비스 부문 가격 인상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수년간 확대되어온 경상수지 적자폭은 한동안 잊고 지냈던 외채망국론의 망령을 다시 일깨우고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가 정치·사회·문화 등의 기초 구조를 형성한다고 한다. 그러나 개도국의 경우, 흔히 정치적 변수가 경제 활동의 명맥을 결정한다. 1996년 OECD 가입을 바라고 있는 한국의 경우, 여전히 이러한 측면에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장 경제를 표방한다면서 경제를 압도해온 정치 권력의 증가가 비자금 추정 과정에서 드러났고, 그 뒤처리 과정에서도 거듭 드러날 1996년 경제 모습이 우려된다.♣